

혼돈의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 구성요건 등 놓고 '진통'

당헌당규 해석 놓고 당내 이견
李대표 측, 절차적 정당성 등 반발
비대위 형태 두고 갈등 촉발 예상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선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톱으로 운영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진 23일 만에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비대위의 구성 요건,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헌당규 해석 및 내부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추천 논란과 설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잇따른 리스크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30%선이 깨지는 등 정권교체 초기 초유의 집권여

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맞이했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 요건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

계는 권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31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대표(이준석), 원내대표(권성동), 선출직 최고위원(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선출직 청년최고위원(김용

태), 지명직 최고위원(윤영석), 정책위의장(성일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6·1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뺀 7명이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이었다.

그러나 총원 9명으로 봤을 경우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과반선이 무너진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 비대위 전환에 협력 의사를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반수(4명 이상)가 사퇴해도 된다는 주장을 비롯해 최고위 현원도 총원인 9명, 현원인 7명, 지명직인 윤영석 최고위원을 뺀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

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선임도 문제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표 권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임명 권한도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내년 1월 복귀할 예정인 만큼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이 대표를 대행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할지 등 비대위의 형태를 두고 당내 갈등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복귀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백정의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민주당 8·28 전당대회 '3파전' 압축

'산전수전' 李 '이슈선점' 朴 '균형발전' 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특유의 추진력 강점
박용진, 사회 난제 공론화 탁월
강훈식,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

장재직시절, 노인·교육·보육·청년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기지사 재임 시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을 열쇳말로 내걸어 대형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에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하고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당선 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박용진 후보도 사회의 난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다.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일약 '스타 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미·중·일의 대표 정당들과 경쟁하는 국제정당, 관료들보다 유연한 경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연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사회적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개인기로 몸집을 불려온 만큼, 앞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름	이재명 1964년생	박용진 1971년생	강훈식 1973년생
정치경력	성남시장(재선) 경기도지사	재선 국회의원(강북을) 진보신당 부대표	재선 의원(아산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학력	중앙대	성균관대	건국대
장점	직전 대선 주자 높은 인지도	의정활동성과(유치원 3법 등)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	임종석, 조용천 등 공개적 지지 유일한 비수도권 총천원 후보
단점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중심	지지 기반 부족	인지도 부족
당색선방안	지역위원회 당원총회 상설적 당원투표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제 원외위원장 당직 부여 취약지역인적·재정적 지원, 비례대표 의무 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의원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위성정당 금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패율제 공천예측가능성 투명성 강화	진보재구성위원회 설치 국회 국민통합특위 설치 중대범죄 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원칙 법제화 7인의 대선주자 양성 당원총투표제 5개 미래수도 양성
경제·해법	기본적인 삶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 당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신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문제는 경제야위원회, 한걸음 양보위원회 출범

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 해낼지는 박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인 박주만·강병원 후보와 당내 중진인 설훈·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일한 비수도권·총천원 후보로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상승세의 동력이 된 모양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 경찰국 위법성 검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헌재에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자"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백태홍 기자

"국민제안 투표 어부징 발생... 톱3 미선정"

대통령실 "변별력 떨어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민원과 청원을 받는 '국민제안'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10 투표'를 진행해 톱3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어부징 사태로 이번에는 톱3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을 신설해 1만2000여건의 민원·청원을 제안 받았으며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과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톱10 투표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부징'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어부징, 특히 해외 IP 등에서 들어와서 당초 설계와 보안, 차단 노력을 했지만, 우회적인 어부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부징 사태로 톱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외 IP 및 우회 시도가 계속 발생했고, 투표 종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의 기자